



주간통일정세 2011-02(2011.01.10~01.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은, 8세대 김일정 中혁명유적 방문(1/12, 열린북한방송)**
 -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펴낸 ‘만화 김정은’에 따르면 김정은은 8세였던 1991년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방문했음.
 - 책은 “김용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장과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동행했으며 방문 장소들은 2010년 8월 김정일이 순회했던 곳과 유사했다”고 전함.
 - 하 대표는 후지모토 겐지 씨가 지난해 10월 방한했을 때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성격을 닮은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총애했다며 이 일화를 소개했다고 밝힘.
 - 책에는 “김 위원장이 2009년 8월 원산에서 군과 당의 핵심 간부를 모아놓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우라늄탄으로 3차 핵실험도 강행할 결사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
 - 책은 김정은이 2007년 1월 김 위원장과 고모와 고모부인 김경희·장성택, 현철해 대장 등 소수만 참석한 측근모임에서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주장
 - 또 김정은이 2007년부터 사이버 테러 부대를 관할하면서 2009년 7월 7일 남한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했으며, 2009년말 단행했으나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도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주장

- **北김정일, 올 첫 공개활동…남포유리병공장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시찰)함.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올들어 첫 공개활동이며, 구랍 31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12일만임.
 - 수행원 명단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은 언급하지 않음.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강양모 남포시당 위원회 책임비서, 당 정치국 위원들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박도춘,



태종수(당 비서 〃), 주규창(당 부장 〃)이 수행

● 北김정일·정은, 평북도 내 공장 현지지도(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수풍베어링공장 등 평안북도 내의 공장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보도
-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방문해 올해 첫 현지지도(중앙통신 1.12보도)를 했으며, 김정은과 함께 시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 또 압록강일용품공장을 방문해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김정일 동지께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공장에서 점령해야 할 중요생산공정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 목표를 제시하고 실현방도까지 가르쳐줬다”고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1/11 김정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12/31)에 대한 ‘친필書翰 <2011.1.5 김정일>’ 전달(1/11, 중통)
- 1/11 김정일, 새로 건설된 남포 유리병공장 현지지도(1/12, 중통)
 - 강양모(남포시 당책), 김기남·홍석형(정치국 위원들), 김경희(당부장), 박도춘·태종수(당비서들), 주규창(정치국 후보위원) 동행
- 1/14 김정일, 김정은, 수풍베어링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 등 평안북도 내의 공장을 현지지도(시찰)(1/14, 중통)
 -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수행
- 1/15 김정일, 김정은,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이후 문화회관에서 공장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했다.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박도춘·태종수·김평해(당 비서 〃), 주규창(당 부장 〃)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黃北·남포시, 박태덕(黃北道黨 책임비서)·강양무(남포시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공동시설 과업 관철 군중대회’ 개최(1/10, 중방)
- 평양밀가루공장 등, 새해 공동시설 관철 쫓기모임 진행(1/12, 중방)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공동시설’ 과업 관철 위한 쫓기모임 각각 현지에서 진행(1/12, 중방)



나. 경제

● 北, '민수용 경수로 건설 중' 재차 주장(1/10, 러시아24)

- 러시아 뉴스전문 TV 채널 라시야 24 인터넷판은 9일 평양에서 발행되는 해외홍보용 주간지 평양 타임스 최신히를 인용해 북한이 경수로 건설 추진을 인정하면서 현재 경수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축 공장에서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은 앞서 구랍 29일 노동신문을 통해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리나라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었음.
- 평양 타임스는 북한의 독자적 경수로 건설 결정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시설 가동은 늘어나는 국가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함. 신문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이 일부 국가들만의 독점적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대풍그룹, 설립후 1년간 외자유치 전무(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이 설립 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
- 소식통을 인용, “대풍그룹이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것이 전혀 없다”면서 “홍콩의 사법기관도 역내 북한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풍그룹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는 상황이어서, 대풍그룹은 외자유치 기관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말함.
- 홍콩 상업경제개발부의 조세핀 로 공보 담당관은 RFA에 “홍콩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에 계속 동참하고 있다”면서 “대풍그룹과 조선개발투자펀드 등 북한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北상원시멘트 생산량 동결, 시멘트난 심화(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공언한 2012년을 앞두고 대표적 시멘트 공장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올해 증산계획을 세우지 않아 '시멘트 대란'이 우려된다고 방송은 전함.
- 상원시멘트의 경영권을 가진 프랑스 라파즈사(지분율 50%)의 캐럴라인 윈클러 공보담당관은 “북한 내 사업은 꾸준한 상황이지만 올해도 공장 가동만 신경쓸 뿐 시설확장이나 투자확대 계획은 없다”고 방송에 말함.
- RFA는 “상원시멘트의 생산량은 연간 200만~250만t으로 북한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최고 39%를 차지한다”면서 “이 공장에서 만드는 시멘트는 대부분 평양 시내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류경호텔 재건



- 축에 공급된다”고 밝힘.
- 함경북도 관계자는 이 방송에 “상원시멘트와 순천시멘트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모두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사업과 희천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면서 “지방의 건설현장에는 작년 10월부터 시멘트와 강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전함.
 -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원시멘트의 노동자들에게 “2011.1.5 김정일”이라는 친필을 보내 생산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밝힘.
 - 이 방송에 따르면 상원시멘트 노동자들은 작년 12월 31일 김정일 위원장에게 올리는 편지에서 “올해(2010년) 시멘트 생산목표를 두 달 앞당겨 달성하고 연말에는 최고 생산기록을 세웠다”면서 “생산설비 보수를 빨리 끝내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함.
- **北, ‘국가가격제정국’을 ‘위원회’로 개편(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가가격제정국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
 - 통신은 13일 “국가가격제정국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이날 발표됐다”고 짚막하게 보도
 - 그간 국가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가가격제정국은 농·공산품의 가격을 매기고 주민들의 생활비를 산출하는 등 가격과 임금의 체계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여, 국정가격 등을 정해 북한내 물가를 통제, 경제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임.
 - 우리의 처(處)급 기관으로 내각의 성(省)보다는 하위기관이지만 위원회는 내각 산하에 있더라도 성보다는 규모가 큰 기관이라서, 위원회 승격은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북한 당국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음.
- **외화난 심각한 北·탄소배출권 판매 추진(1/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외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 소식통은 이 방송에 “친환경적인 수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유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사되면 연간 최대 1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어 “2~3년 전만 해도 북한은 관련 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껴 CDM 등록에 소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자,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외화도 벌 수 있는 탄소배출권 판매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덧붙임.



- 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새로 설립되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전함.
 - 이어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힘.
 - 통신은 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
 - 이와 함께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임.

- 北, 지난해 對중국 석탄 수출량 410만t(1/15, 미국의 소리(VOA))
 - 지난해 대중국 석탄 수출량이 410만t에 달해 2009년에 비해 14% 증가
 - 중국 해관통계를 인용, "지난해 1~11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이 약 410만t을 기록하며 2009년 1~12월 수출량 약 360만t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7월까지 수출량은 총 151만t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수출량이 급증해 8~11월 4개월 동안 255만t을 기록했다"고 전함.
 - 수출액도 지난 3월에 t당 52달러였던 국제 석탄가격이 11월에는 82달러까지 오르는 호재까지 겹쳐 3억 4천만달러에 달했다고 방송은 밝힘.
 - 대중국 철광석 수출도 크게 늘어 1~10월까지 163만t(1억5천만달러)에 이르며 4월까지 월평균 11만t에 그쳤으나 7월 23만t, 9월 22만8천t, 10월 17만1천t으로 하반기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송은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천연 혈전용해물질(뇌혈전 등 순환기 질환 치료, 예방) '청혈효소' 개발(1/13,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돌 많은 북한쌀 보다 고가 중국쌀 선호(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산 쌀에 돌과 모래가 너무 많아 북한의 '장마당'(시장)에서 값비싼 중국산 쌀을 선호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북한산 쌀의 질이 갈수록 떨어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면서 "협동농장에서 (생산량을 부풀리려고) 일부러 돌을 넣는다는 소문까지 번지는 상황"이라고 말함.
 - "지난 4일 혜산시 장마당에서 1등급 중국산 쌀인 '길림광천미'는 1kg당 1천560원(북한돈)인데 비해, 북한에서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문덕쌀'이나 '해주쌀'은 1천360원에 팔렸다"고 소개
 - 혜산 장마당에서 쌀장사하는 다른 주민도 "국산(북한산) 쌀은 아무리 좋아도 돌이 많고 겨가 벗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국산 쌀보다 값이 떨어진다"면서 "중국산 쌀은 일지 않고 그대로 밥을 해도 돌이 없는데, 국산 쌀은 세 번을 일어도 돌과 모래가 잡혀 서민들조차 질 좋은 중국산 쌀을 찾는다"고 말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작년 11월 초 함경북도 어랑군의 한 농장에서 작업반장과 세포비서가 쌀 1t당 20kg의 모래를 넣고 같은 양의 쌀을 빼돌렸다가 발각돼 처벌 받았다"면서 "농장마다 허위보고로 생산량을 부풀리는데다 쌀의 품질이 갈수록 떨어져 작년 12월부터 국가양정국 검열이 시작됐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농장마다 의무납부토록 돼 있는 균량미의 양을 부풀리려고 쌀을 덜 건조하거나 모래를 섞어 넣는 현상이 심하다"면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밥에 돌이 너무 많아 '인민군대가 바람에 날려 갈까봐 일부러 쌀에 돌을 넣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고 있다"고 RFA에 밝힘.

- **北, 외국인 초청 첫 아마골프대회 개최(1/13, 연합뉴스)**
 - 처음으로 외국인이 참가하는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중국 단둥(丹東)의 중국청년여행사(CYTS)와 공동으로 최근 골프대회 전용 홈페이지(www.northkoreanopen.com)를 개설해 전 세계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를 포함한 5일짜리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루핀여행사는 "평양골프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핸디캡 18인 전세계의 모든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할 수 있으며 예약은 루핀여행사와 단둥 CYTS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
 -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각 홀마다 정해져 있는 타수를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될. 999유로(145만원)짜리인 이번 관광 상품



에는 북한 비자와 서류 대행비를 포함해 라운딩 비용, 골프채 대여 비용, 중국과 북한 사이의 철도 교통비, 식사비, 5성급 호텔에서의 4박 숙박비, 사흘간의 관광비용 등이 포함

-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91년 이 골프장을 오픈했을 때 생애 첫 라운딩에서 11개의 홀인원을 포함해 38언더파를 기록해 세계기록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北도메인 ‘.kp’사용…접근성 강화 의도인듯(1/13, 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도메인 ‘.kp’를 쓰기 시작
-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의 경우 ‘www.kcckp.net’이나 숫자로 구성된 기존 IP주소로는 프록시서버를 거쳐 우회해야 접속할 수 있지만 새 주소 ‘www.naenara.com.kp’를 쓰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음.
- 기존 주소 중 ‘kcckp’는 조선컴퓨터센터의 약자인 KCC에 ‘kp’를 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라는 국가명과 사이트의 본래 이름 ‘내나라’가 전혀 연상되지 않음.
- 반면 새 주소는 북한 연상 효과와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11일 4천여 명이던 ‘내나라’ 방문자수가 12일에는 약 6천500명으로 늘어남.
- ‘내나라’ 첫 화면 상단에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소식’이라는 제목 아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이 모아져 있고, 그밖에 대남선전용 기사와 북한의 정치·경제·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됨.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사이트에도 ‘www.friend.com.kp’라는 주소가 새로 부여됨. 북한 조선중앙통신 사이트 주소도 ‘.kp’ 형태(www.star.edu.kp)로 바뀌었음.

● 北, DMZ 고분서 군장교 가담 도굴성행(1/13, 자유북한방송)

-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북한군 부대의 장교들이 도굴범들과 손잡고 DMZ 인근 고분의 문화재를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방송의 함경북도 청진시 통신원은 “개성시를 끼고 있는 황해남도 와 강원도의 DMZ에 배치된 군 장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군사시설 주변의 고분에 도굴범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이런 군인들은 고분 도굴을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고 실력있는 도굴꾼을 찾아 손을 잡기도 한다”고 말함.
- 이 통신원은 이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북한 전역의 많은 고분들이 파헤쳐져 값나가는 문화재가 나올 만한 곳은 DMZ뿐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면서 “이 지역 군부대에서는 건설작업을 하다 골동품이 나오면 브로커에게 직접 팔아넘길 정도”라고 덧붙임.



- **北한파속 땀감부족 극심, 밥도 못할 지경(1/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땀감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함경북도 무산 주민은 이 방송에 “요즘엔 식량보다 땀감이 더 문제”라면서 “땀감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직접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워 난방은 고사하고 밥도 못해먹을 지경”이라고 말함.
 - 탈북자는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땀감 살 돈을 급히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땀감 한 수레에 3천원이 넘고, 좋은 나무는 7천원은 줘야한다고 들었다”고 말함.
 - RFA는 “석탄은 한 수레에 1만원이나 해 보통 주민들은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소개

- **北산천군서 ‘문화 류씨’ 시조 류차달 묘 발견(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이 최근 ‘문화(文化) 류(柳)씨’ 시조인 유차달(柳車達)의 묘를 발견해 국가보존유적으로 등록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묘는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 구월산 기슭의 달천온천 인근 마을에서 4개의 비석, 망돌(맷돌), ‘묵방사라는 건축물’ 등과 함께 발견
 - 북한의 역사기록에는 류씨 시조묘라는 뜻을 가진 ‘류릉’이란 용어가 있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음.

- **北야심작 ‘회령음식점 거리’, 주민 갈등만(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야심차게 건설한 ‘회령 음식점 거리’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
 - 지난해 12월, 회령 음식점 거리를 찾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라고 지시했지만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함경북도는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여지책으로 ‘식사표’를 이용해 식당마다 10명분의 식사만 공급하기로 했음.
 - 전골식당, 짜장면집, 순두부집, 강냉이(옥수수) 음식점, 토끼고기 전문식당, 청량 음료점 등 15개 식당으로 이뤄진 이 거리에서 유일하게 식사표가 없는 손님을 받는 ‘회령관’의 냉면이 1천800원인데 반해, 식사표가 있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강냉이 음식점의 경우 300원만 내면 대동강 맥주 한 병, 빵 4개와 평평이(팝콘), 강냉이가루 지짐(부침개)이 차려짐.
 - “식사표가 인민반(보통 30가구로 이루어진 최말단 행정조직)별로 두 달에 3장 정도 나오다 보니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다”면서 “거름 생산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잘 수행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표를 주고 있는데 표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음.



- **北축구감독들, 2월 伊 후원사 방문(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축구 감독들이 오는 2월 북한 축구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레게아(LEGEA)'를 방문해 추가 후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 레게아의 홍보, 후원 담당자를 인용, "2월쯤 북한의 축구팀 감독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레게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북한 대표팀의 선전으로 매출 효과를 본 레게아 측은 이들과 만나 추가사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탈리아의 스포츠용품 업체인 레게아는 지난해 북한 대표팀과 4년간 490만달러(약 60억원) 상당의 후원계약을 맺었으며 북한 청소년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에도 유니폼과 축구화 등을 후원하고 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010년 北 태권도 최우수 男女선수(이명진, 오금주)와 감독 선정 (1/11,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日 직접대화 표명은 긍정적 움직임(1/1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긍정적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마에하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신세기의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과 국가관계의 발전에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국가들과는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
 - 마에하라 외무상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해 하나의 큰 테마로서 일본과 북한간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함. 이어 "일본의 주권에 관련된 납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6자 회담 등 다자 회담에서만 북한 문제를 다루지않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양국간 직접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日本 정부인용, 美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오키나와 근해 파견을 "韓·美·日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對北 군사적 위협과 간섭책동을 강



화하려는 책동”으로 비난(1/10, 중방)
 - 日本의 1969년 당시 외교문서(한반도 유사시 日의 南 후방지원 구상) 공개(12.22) 관련 “역대 日집권자들의 조선침략야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서 재침의 기회를 노려온 변함없는 속심”이라고 비난(1/11, 중통)

3. 대남정세

● 北, 남북 당국간 회담 거둬 요구(1/10, 우리민족끼리)

-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담긴 중대한 조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실천적 조치를 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해 ‘별도의 전통문 확인’이니, 그것이 없이는 ‘공식적인 대화제 의로 보기 어렵다’느니 하며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족 앞에 지닌 책임을 자각하는 당국이라면 불미스러운 과거를 백지화하고 조건 없이 만날데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에 지체없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 ‘마주 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다른 글에서 “악화된 북남 관계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은 북과 남이 마주앉아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참여한 북남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北매체 ‘해킹 감행자 경거망동 말라’(1/10, 우리민족끼리)

-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실과 관련,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고 도발”이라며 “이번 해킹을 감행한 자들은 저들의 비열한 행위가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 논평에서 “지난 8일밤부터 9일 오전사이에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가 불법침입자들의 해킹행위로 잠시 폐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우리 민족끼리’의 영향력을 막아보려는 극악한 반통일 대결분자들의 비열한 망동”이라고 비난
-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불법해킹을 한적이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번엔 감행된 불법, 무법의 해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당국, 적십자회담 제의...정부 역제안(1/10,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통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음.



- 통일부는 “북측의 위장 평화공세”라고 일축,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
 - 북측은 또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2월 1일 문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오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알려줌. 이와 함께 북측은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로 남측 소장에게 12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줌. 북측은 통지문을 모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내왔음.
 - 논평은 이어 “북한은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나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고 전제한 뒤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힘.
 - 또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北, “평화협정 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없었을 것”(1/11,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현 사태 타개의 근본열쇠’라는 논평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지난해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 또 “현 시기 조선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은 조미(북미)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고, 신뢰를 구축하자면 조미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면서 “그 선행 공정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주장
 - 이어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 입장을 버리고 조미 군사적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 추동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임.
- 北, 남측 민간단체에도 대화공세(1/12,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언)는 8일자 팩스를 통해 우리 측 민간, 종교단체들에 오는 2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것을 제의
 - 팩스의 수신인에는 ‘겨레얼 살리기 운동본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천주교여성수도회 장상연합회’ 등이 망라돼 있음.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에 개성이나 금강산, 제3국에서 ‘6.15공동위원장 회의’나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자고 주문
 - 조선사회민주당도 우리 측 민주노동당에 정당교류를 위한 회의를 열자고 요구
 - 북측은 또 국내 민간, 종교단체에 최근 신년사(36건)와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42건) 등을 담은 팩스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
- **남북 판문점 적십자채널 8개월만에 정상화(1/12,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측 연락관이 오늘 낮 12시 15분께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우리측 연락관에게 업무개시 연락을 했다”며 “이로써 판문점 적십자 연락업무와 직통전화도 다시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 약 10분 동안 진행된 남북간 통화에서 우리측 연락관은 북측에 연락채널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북측 연락관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남북 당국간 각종 통지문 교환에 사용되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 이날 정상화됨에 따라 양측 당국간 대화 인프리카가 다시 복원됨.
- **北,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회담 제의(1/12, 연합뉴스)**
- 북측은 12일 금강산관광재개 회담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남북 경제협력협약사무소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 3통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통일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2월 11일 개성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도 2월 9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열자고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다.
 - 북측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도 북측 소장 명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 인원이 복귀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 경제협력사무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
- **北조평통, 南에 대화 호응 재차 촉구(1/14,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무조건적인 회담 개최에 대한 남한 당국의 호응을 재차 촉구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측은 공연한 의구심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만큼 남측은 마음과 자세를 바로 가지고 우리의 대화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성근하게(성실하게)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日외상 “北 구체적 행동 취하는게 중요”(1/15)

- 방한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5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종정책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한·미·일 공조로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마에하라 외무상은 또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발행위를 한 것은 북한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할 수 없고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게 한·미·일의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음.
- 이어 “(중국의 제안) 당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6자회담 수석대표를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파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한국과 일치단결해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비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며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시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마에하라 외무상은 또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한 일본 의회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24일부터 시작되는 의회에서 되도록 빨리 승인을 하고 인도(반환)를 빨리 실시하고 싶다”며 “사할린 문제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앞으로도 대응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양국 경제교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中, 北 우라늄농축 ‘판단유보’..파장 예상(1/14)

-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해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혀 주목됨. 추이 부부장은 14일 오후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 부속건물에서 열린 란팅포럼에서 중미관계 기초연설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내 이해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관련 시설을) 본 적이



- 없고 미국 전문가들이 본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핵시설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 추이 부부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이 명백하게 9.19 공동성명을 어긴 것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하고 북한을 제재하자고하면 중국이 동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판단 유보 입장을 내놨음.
 -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이 일관되고 결연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유관 각측은 9.19 공동성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핵문제의 과거 처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할 더욱 적합한 무대는 안보리가 아닌 6자회담”이라고 강조해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음.
 - 추이 부부장의 중미관계 기초연설과 질의응답이 이뤄진 중국 외교부의 란팅포럼은 이번이 두번째로 오는 18~21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음. 추이 부부장은 기초연설에서 시중일관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 그는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2011년 중국의 (5개년 발전계획인) 12.5 계획이 시작되고 중미간에 핑퐁외교가 시작된 지 40년만에 성사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했음.
 - 이어 “미중 양국은 후 주석의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중미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추진은 신시대 중미관계의 주선율”이라고 덧붙였음. 아울러 “중미 양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대국들로 테러 확산 반대,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한 배를 탄 마음으로 유효한 협력을 해왔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소통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 추이 부부장은 그러면서 “수교이후 중미 양국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며 곤란과 장애도 있었다”며 “가장 민감한 것은 대만문제, 중국의 주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핵심이익일뿐더러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이를 타당하게 처리해 중미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근래 미국이 동맹국과 공동으로 중국 포위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고 중국은 그 것을 존중한다”며 “특히 미국이 일본 등과의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게 다른 3국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며 어느 국가에도 중국 포위권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음.
 - 아울러 추이 부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급속한 위안화 환율 절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음.

● 美국방 “北, 대화 진정성 입증 조치 취해야”(1/13)

-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촉구했음.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6자회담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북측이 이를 보여줄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노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달성해야 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간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음.
- 게이츠 장관은 이어 “모든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 한국의 자위권 발동에 힘을 실었음. 게이츠 장관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존의 자제 정책이 군사적 대응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음.
-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악의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일본은 한국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음. 중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게이츠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방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임.

● 中 우다웨이 “북일 대화 추진 환영”(1/13)

- 일본이 북한과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데 대해 중국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음.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일행에 따르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12일 베이징 시내에서 가토 전 간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일 대화에 의욕을 보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비상하게 주목하고 있고, 환영한다”고 평가했음.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북한도 한·미·일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핵화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2개국 간의 대화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한가지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는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중국이 남북간 무력 충돌에 대해 강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고 확인했음.
- 중국의 국산 항공모함 건조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대해 미·일 등이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항공모함은 다른 나라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항모를 한척 만든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반적인 무기일



뿐이다”라며 “(스텔스 전투기도) 미국이 보유하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만 우려하는가”라고 반론했다고 가토 간사장 등은 전했다.

● 김외교 “北 UEP, 우리놈 핵무기 만들려는 의도”(1/13)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우리놈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놈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플루토늄에 이어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이 같은 언급은 UEP가 평화적 핵 에너지의 이용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는 당국 차원의 판단을 표명한 것임.
- 김 장관은 “북한이 UEP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려면 NTP(핵무기 비확산조약) 체제의 일원이 돼야 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NPT에서 탈퇴했고 IAEA 안전조치에 대한 사찰도 없었으며 핵실험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음.
- 이어 UEP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 대해 “관련국들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UEP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 틀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12일 전통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회담 등을 거듭 제안한데 대해 “위장 평화공세이며 남남갈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명박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해 세차레에 걸쳐 국민들이 희생됐음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지원만 받아가려고 한 것을 보면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 그는 특히 “남북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무언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음.
- 김 장관은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와 자세가 돼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한미일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됐고 러시아도 어느정도 돼있다”며 “중국도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등의 부분은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재개조건은 중국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평화협정은 남북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중국은 (평화협정에) 같이 참여



하거나 보장하는 형태가 좋다”며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간에 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며 그것을 우회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는 평화협정의 기본 당사국으로 남북한을 상정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형식을 정부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반응이 주목됨.
- 김 장관은 “북한이 북·미·중 3자간에 평화협정을 서명하자는 것은 다시 60년전 휴전협정 서명 당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금의 한국은 60년전의 한국이 아니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그는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일 직접대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원칙적인 언급으로 본다”며 “일본이 우리와 협의없이 북한과 대화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 장관은 “3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대화 재개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그것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시동도 걸지못한 北UEP 안보리 논의>(1/12)

-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에 아직 시동이 걸리지 못하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의 UEP 논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언제 논의할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당초 미국의 주도로 이르면 금주부터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언제 논의가 본격화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임. 앞서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간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UEP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안보리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서 UEP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한국의 우방은 물론, 러시아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비난하는 데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지난 달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반도 긴장에 관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반대해 성명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음. 보즈워스 대표도 최근 방중기간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



에서 안보리 논의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입장과 남북관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보리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오는 19일께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를 위해 안보리 논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안보리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음. 또 미국의 주도로 UEP가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다루지더라도 논의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결의문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부소식통은 “안보리가 UEP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사국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3년만에 교체(1/11)

- 일본 정부는 11일 내각회의에서 신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겸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57) 전 지구문제 담당 대사(심의관)를 임명했음.
- 스기야마 심의관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지한파’ 외교관으로 꼽힘. 한국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함. 아이치(愛知)현 출신으로 와세다대를 거쳐 1977년부터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중동 아프리카국 등을 경험했음.
-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전 수석대표는 주 인도 대사로 발령났음. 사이키 국장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인 2008년 1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의 후임으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에 취임했고, 이때부터 만 3년간 6자회담 대표로 활약했음.
- 1998년 주한 정무공사를 거쳐 2002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참가했던 오타베 요이치(小田部陽一.60) 전 외무심의관은 주 제네바 대사로 옮겼고, 후임 외무심의관에는 니시미야 신이치(西宮伸一) 뉴욕 총영사가 임명됐음.

● 中, 남북 대화·협상 다시 강조(1/11)

- 중국이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조건적인 대화 촉구에 남한이 진정성 결여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대화과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중국은 각측의 직접대화과 소통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그런 과정을 거쳐) 정세가 진일보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



- 란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핵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실현하는 유효한 길”이라며 “중국은 유관 각측이 공동노력으로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돼 2005년의 9.19 공동성명내 각 항목의 목표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이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을 통한 미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대만에의 미국 무기판매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그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양국관계에는 복잡하고 비교적 민감한 영역이 있다”면서 “특히 양국 군사교류는 안정적이고 믿음있는 정치적인 기초에서 건설되고 유지돼야 한다며 그 것은 바로 양 국이 서로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언급은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의 무기 판매라는 미국의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양국 군사 교류와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 앞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10일 게이츠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중국은 중·미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재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중국이 독자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J-20)’이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즈음해 공개된 배경을 묻자 “중국은 평화의 길을 갈 것이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펴왔다”면서 “과학 발전에 따라 무기 개발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젠-20’이 이날 오후 12시50분(한국시간 오후 1시 50분) 전후에 이륙해 1시 11분에 착륙했으며 이착륙 시간을 제외하고 18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소개했다.

나. 미·북 관계

● 샤프 “北미사일 위협 판단時 타격”(1/14)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샤프 사령관은 이날 미 공영방송 P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첫번째가 (북한 미사일을) ‘억지(deter)’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응(respond)’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맹국들은 그렇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샤프 장관의 이런 언급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중국 방문기간에 북한이 향후 5년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아울러 샤프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와 관련,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게이츠 “北, 미사일.핵 실험 유예해야”(1/11)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북한이 대화에 앞서 선행해야 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주문했음.
- 게이츠 장관은 방중 사흘째인 이날 베이징(北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나눴냐고 묻자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무조건 대화재개 요구에 남한이 성의가 결여돼 있으며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게이츠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한의 인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음.
-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미국을 향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음. 그러나 그는 “비록 북한이 ICBM을 손에 넣게 될지라도 그들은 매우 제한적인 능력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북한을 자제시키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면담했다고 밝히면서 “미·중 양국 군(軍) 현안과 북한문제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 주석이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J-20)’의 시험 비행을 했다고 확인하고 이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과는 관계 없이 미리 계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음.
- 그는 이어 중미 관계가 냉각된 계기가 된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中, 北라진항 운송 석탄 상하이 도착(1/16)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을 통해 첫 운송에 나선 훈춘(琿春)의 석탄이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고 신문화보(新文化報)가 16일 보도했음. 중국이 라진항을 이용, 동해 항로를 거쳐 동북지역의 물자를 남방에 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신문은 천흥강 훈춘해관장을 인용, 훈춘광업그룹이 생산한 석탄 1만7천톤을 실은 화물 운송선 ‘진보(金博)’호가 지난 11일 라진항 1호 부두를 출발, 사흘 만인 지난 14일 상하이 푸둥(浦東)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 이에 앞서 훈춘광업그룹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진항으로 석탄을 운송했음. 이번 남방 운송에 사용된 중국해운그룹 소유의 화물선 진보호도 이달 초 다롄(大連)항에서 라진항으로 이동했음.
- 중국의 창리(創力)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2009년 이 부두 정박지를 보수하고 확장해 연간 1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중국 당국도 지난해 상반기 취안허-원정리를 잇는 노후한 두만강대교를 보수하고 라진-상하이항 해상 운송항로를 승인하는 등 라진항 활용에 대비해왔음.
- 중국은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새 다리를 건설하고 원정리-라진을 잇는 새로운 도로 신설을 추진하는 등 라진항을 이용한 물류 운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12억톤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훈춘을 비롯해 두만강 유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하자원과 곡물 생산지였으나 남방 운송을 위해서는 수백km 떨어진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까지 철도로 수송한 뒤 배편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컸음.
- 그러나 50여km 거리에 있는 라진항을 이용,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해상 운송 길이 열림으로써 남방으로의 대량 운송이 가능해졌음. 훈춘광업그룹은 이미 안후이(安徽)나 산둥(山東) 등 중국 동부 연안지역으로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음.
- 북한도 중국 선박의 라진항 운항에 따라 항만 사용료를 챙길 수 있어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中전문가 “해방군 北주둔설 사실무근”(1/16)

-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북한 경제특구 주둔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평(江平)은 중국군 북한 경제특구 주둔설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문화보(文匯報)가 16일 보도했음.
- 장평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유엔 평화유지 활동 및 소말리아 해적 퇴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 이외에 단 한 명의 군인도 해



외에 파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5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특별시(함경북도에 위치)에 중국군이 최근 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음. 조선일보는 또 중국군의 북한 주둔은 1994년 12월 중국군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北, 의지할 곳 중국뿐·작년 교역 사상최고” < VOA > (1/11)

- 작년 1~11월 북중 교역액이 30억6천124만 달러에 달해 이미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교역액(27억9천300만 달러)을 9.6% 초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 VOA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10억5천만 달러(43% 증가)를 수출해 사상 처음 10억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수입도 20억1천625만 달러(28%) 늘어나 결국 9억7천126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 북한의 수출은 특히 △7월 1억3천600만 달러(전년동기비 61% 증가) △8월 1억6천300만 달러(86%) △9월 1억3천100만 달러(64%) △10월 1억2천900만 달러(130%) △11월 1억3천300만 달러(153%)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이어갔음.
- 미국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소장은 “남한과 경협이 축소되고 국제 제재로 다른 나라와 교역도 제한된 상황이어서 결국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중국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VOA에 말했음.
- 북한의 수입 품목 중에는 ‘원유 등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가 2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은 ‘보일러와 기계류’, ‘텔레비전 등 영상설비와 음향기기’ 순으로 많았음. 수출 품목으로는 ‘석탄·철광석 등 광산물’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의류, 철강, 수산물이 뒤를 이었다고 VOA는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日 마에하라 외상, 北에 대화제안 논란> (1/12)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6자회담에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마에하라 외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평화선언을 확인하면서 직접 대화를 확실하게 진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음.
- 그는 또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개최의 시비에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재작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향후 (북한과의) 논의는 백지상태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마에하라 외무상은 작년 말부터 기회있을때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 마에하라 외상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 그는 야당 당시인 2007년 국회 질의에서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교 재량을 좁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평양선언으로 돌아가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패키지 해결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전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대화제안은 자칫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산케이신문은 12일 “미국과 한국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과 대화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마에하라 외상이 돌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음.
 - 신문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 마에하라 외상의 ‘백지상태로 임한다’는 자세와는 대비된다”고 전하고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사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음.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마에하라 외상의 직접대화 제안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음.
 - 마에하라 외상의 직접대화 제안은 대북 문제와 관련 향후 한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면서 납치자 문제를 진전시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됨. 민주당은 재작년 8.30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전담 각료까지 임명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대화채널이 끊겨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긴밀한 외교관계에 있는 한국의 양해가 필요해 마에하라 외상이 14일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지 관심임.
- 北 “日 직접대화 표명은 긍정적 움직임”(1/10)
- 북한이 일본의 대북 대화재개 의사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음.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긍정적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냈다고 전했다.
 - 이 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마에하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신세기의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과 국가관계의 발전에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국가들과는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작년 8.30 총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 매체가 일본 각료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마에하라 외무상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해 하나의 큰 테마로서 일본과 북한간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주권에 관련된 납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6자 회담 등 다자 회담에서만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양국간 직접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北문제 해결, 올해가 중요 시기”(1/14)**

-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금년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4월 북한은 강성대국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꾸준히 개발을 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미국이 신속하게 군사적 지원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사례했다. 특히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훈련 참가를 언급, “연평도 사건이 생기고 나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서해안에 와서 군사 훈련을 함께하는 등 미국이 신속하게 보여준 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최근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정세 안정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김관진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생산적 토의’로 규정하면서 양국 군이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내용을 주로 소개했다고 함.
-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남북한 간 직접 대화 재개를 통해 6자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미국 측에서는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등이 배석했다.

● **한미 “北,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해야”(1/14)**

- 김관진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4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한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



- 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김 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반도 안보 수호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간 군사적 공조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후 2시40분 시작해 40분 가량 이어졌음.
 - 김 장관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확약, 핵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 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북한의 선행조치를 강조했다고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했다.
 - 장 실장은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추가 도발 때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게이츠 장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게이츠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착실한 준비와 이행은 전작권 전환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대비태세에도 중요하니 이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한미 연합훈련을 앞으로 계속해나가고 특히 연합 해상훈련을 전 해상에서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북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장 실장은 게이츠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하자는 것보다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와서 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음.

●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외교적 협상 가능”(1/14)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위험한 도발을 중지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이로 인한 긴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한으로 6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군사협력과 그외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서 논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김관진 국방장관도 “양국 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대단히 굳건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두 번의 도발을 했다”면서 “국민들은 6.25전쟁 이후 가장 큰 도발로 안보위기를 의식하고 있고, 또 도발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제 강력한 힘만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그 힘의 원천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강력한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미국방장관 회담..동맹 재확인-안보현안 논의>(1/14)

-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일본 방문 결과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설명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주내용은 게이츠 장관의 동북아 순방 결과 설명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미동맹의 공고함 표명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 게이츠 장관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참석한 이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게이츠 장관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동북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게이츠 장관은 지난 13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했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원하는 분위기임.
- 군 관계자는 “새로운 의제가 있어 회담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북한의 동향을 평가하고 기존 대북 억제력 강화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10년간 공동연구”(1/13)

- 이경렬 외교통상부 한미 원자력협정 T/F 팀장은 13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에 대해 양국 기술자들이 10년에 걸쳐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별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 이 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확산 외교와 한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개정 협상과



- 별개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양국의 공동연구 결과를 갖고 추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정부는 당초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결과를 협정문 속에 반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음.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비준 절차를 고려해 2012년 말, 늦어도 2013년 초까지는 협상을 완전히 끝낼 계획임.
 -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4분기 내에 2차 협상을 통해 재처리와 농축, 제3국 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분기별로 워싱턴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이 팀장은 이어 “올해 중으로는 큰 이슈들에 대해 윤곽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10개 정도로 추려지는 핵심 이슈에 대해 기술적 회의 등을 거치면 기본적 이해(understanding)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개최하고 향후 파이로 프로세싱은 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투 트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파이로 프로세싱은 저장 용량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한국이 추진 중인 기술로, 미국은 그동안 경제성과 실용성, 핵확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음.

나. 한·중 관계

● <中언론, ‘한일군사협정’ 움직임에 촉각>(1/11)

- 중국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한일 양국이 하루 전인 10일 국방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한국 국방부 대변인실의 발표를 인용해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내용을 소개했음.
- 아울러 양국이 군 당국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정보보호협정도 맺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도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양국이 국방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군 인사교류 확대와 교육, 인명구조 훈련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회담 내용을 소상히 보도했음.
- 그러면서 일본 민주당이 지난 2009년 9월 집권후 한국 정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은 역사적인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한국 여론을 인용



수 있었다”고 평가했음.

● 한·일 외교 “북일대화 앞서 남북대화”(1/1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5일 북일대화 추진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음.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음.
- 김성환 장관은 “한일 양국간에는 일단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고 오늘 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며 “이 같은 양국간 공통이해를 바탕으로 (북·일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감안해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먼저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그러나 “북일대화가 6자회담 개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일대화는 6자회담의 움직임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음.
- 마에하라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납치·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북일 대화를 적극 추진해나가되, 구체적인 추진시점은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이에 앞서 마에하라 외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과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북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김 장관과 마에하라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남북대화과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제의했다”며 “북한이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한·미·일 공조로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납치문제와 핵문제, 미사일 문제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이면서도 성의 있는 대응을 북한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 국회의 심의가 원만히 진행돼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마에하라 외무상은 “지난 8월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한·일 도서협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기 인도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또 김 장관은 사할린한인 지원과 민간인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마에하라 외무상도 “같이 노력해보자”고 답변했음.

● 마에하라 “핵·미사일·납치 포괄적해결 필요”(1/15)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5일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핵, 미사일, 나아가서는 납치문제 등 인권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일·한, 일·한·미가 공조할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할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한·일 방위·안보협력과 관련, 마에하라 외무상은 “지난번 양국 국방장관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대화를 촉진해나가는 것에 일치했다”며 “한국 국내의 민감성(sensitivity)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한국 측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김성환 장관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 “우리 어선 선장, 日 EEZ 침범 인정”(1/14)

- 독도 근해에서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여부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은 ‘33쌍용호(29t급)’ 선장이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사실을 인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음.
- 외교부 관계자는 “해경 측에서 오늘 새벽 선장을 상대로 진술조사 작성을 완료했다”면서 “선장 이모씨가 일본 측 EEZ 침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이씨는 관련절차대로 담보금을 내겠다는 보증서를 쓰고 나면 오늘 중 풀려날 것 같다”고 전했다.

● <정부, ‘어선 EEZ 침범 사건’에 차분한 대응>(1/13)

- 정부는 13일 독도 근해에서 우리측 어선 ‘33쌍용호(29t급)’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한때 양국 경비함이 대치했다는 소식에 긴장했지만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도하는 분위기임.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도 경비함이 대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진화에 나섰다기 때문에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우리측 어선이 단순히 일본측 EEZ를 침범하면서 생긴 것 같다”며 “공동조사가 끝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음. 다른 당국자도 “해경이 일본측과 현장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외교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돌발악재가 터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당혹감도 엿보임. 더구나 양국간 영유권 분쟁으로 민감한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자칫 양국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한 당국자는 “독도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고 외교장관 회담과도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日 해상보안청 “한일 경비정 대치 아니다”(1/13)

- 독도 근해에서 한·일 경비함이 대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부인했음. 일본 해상보안청은 13일 연합뉴스의 문의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33분께 한국 어선인 33쌍용호가 효고(兵庫)현 부근 바다에 들어온 것을 (일본) 수산청 소속 순시선이 발견했고 입회검사를 하려고 ‘멈추라’고 요구했다”며 “한국 어선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해 순시선이 쫓아갔고 지나치던 한국 경비정과 같이 논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음.
- 이같이 설명한 곳은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산하의 사카이(境) 해상보안부임. 사카이 해상보안부 홍보 담당자는 “한국 어선이 들어온 곳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부근이 아니고, 시마네(島根)현의 오키섬보다도 훨씬 동쪽으로, 일본의 분명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인 효고현 부근 바다였다”며 “수산청 소속 순시선이 쫓아가 붙잡자 한국 어선도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교도통신은 “사카이 해상보안부가 수산청의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어업법상 입회검사 기피)로 33쌍용호의 한국인 선장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13일 오전 0시30분께 효고현 앞바다를 향해 중이던 수산청의 어업지도선이 일본의 EEZ 안에서 33쌍용호를 발견했고, 도주한 것을 오전 11시30분께 오키섬 북서쪽 100km 해상에서 붙잡았다”며 “현장에 한국 해양경찰청의 경비정이 도착해, 한국측 경찰관 3명과 함께 일한(한일) 양측이 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 한·일, 독도 근해서 어선 EEZ 침범 공동조사(1/13)

- 한국과 일본 경비선이 13일 오후 3시53분께부터 독도 남동방 해상 36해리 공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 선적 유자망 어선 ‘33쌍용호



(29t급)의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음.

- 해경과 청와대에 따르면 선원 9명이 승선한 33쌍용호는 이날 오전 9시께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포착한 일본 관공선 4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포항 수협에 신고했음.
- 해경 소속 5001함은 포항 수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즉각 출동, 일부 인원이 독도 남동방 36해리 공해상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에 옮겨타 정확한 경위를 공동으로 확인중임.
- 양측은 일단 33쌍용호가 일본측 EEZ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33쌍용호는 사실 관계 확인이 모두 끝나는대로 '담보금 지불보증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석방될 예정임. 정부 관계자는 "쌍용호 측에서는 일본 EEZ 해상에서 조업을 한 게 아니라 엔진 이상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음.

● 日방위상, 한반도 유사시 상정 법개정 의욕(1/12)

-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서 만든 주변사태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과 관련해 "효과적인 지원 방법 등 제도면에서 검토를 심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상 긴요한 과제다"라고 말했음.
- 이는 한반도 유사시 등의 경우에 자위대가 미군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즉 주변사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급이나 수송 등 '후방 지역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최근 한일 국방회담을 계기로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나라'(한국)도 후방 지원을 하고 싶다"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한 적이 있는 만큼 기타자와 방위상의 발언이 이같은 방향의 법 개정을 상정한 것인지 주목됨.
- 기타자와 방위상은 또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말하는 '주변사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태를 가리킴. 일본은 1999년 한반도 유사시 등을 가정해 주변사태법을 제정해 자위대가 미군의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음.



● 김외교, 日 기타자와 방위상과 회담(1/11)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음. 이 자리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은 지난 10일 열린 한일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김 장관에게 외교적 협력을 부탁했음.
- 이에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 간 회담 제의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음. 또 한일 방위협력과 관련해 국민감정 등 여러 고려요인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 이날 오전 판문점(JSA)을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을 견학한 기타자와 방위상은 회담에 앞서 “(판문점에서) 일본에선 없는 모습이라 긴박감을 느꼈다”면서 “(천안함 사태처럼)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한·일, 한·미·일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음.
- 이에 김 장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관계가 계속 진전하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 日 언론, 한일 국방회담 결과 ‘반색’(1/11)

- 일본 주요 일간지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의 길을 연 한일 국방회담 결과를 일제히 환영하며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음. 발간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은 11일자 조간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한 뒤 3면에 해설 기사와 사설을 실는 등 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다뤘음.
- 이 신문은 ‘안보협력의 질을 착실히 높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히 방위 교류를 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시기”라며 ACSA 뿐만 아니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북한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강하게 남아있는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양국 군사협력의 장애로 거론한 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발족 후 일한(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에 있는 방인(일본인)을 구출하는 문제도 조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음.
- 또 다른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3면 해설기사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일본의 의도를 분석했음. 이 신문은 ACSA가 양국 간 물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나라’(한국)도 후방 지원을 하고 싶다”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덧붙였음.



- 논의를 뒤로 미룬 GSOMIA는 미국이 한국에 참가를 요구하는 탄도 미사일방어(BMD) 체제의 강화에도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일본은 임기가 2년 남은 보수계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배경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도했음.

● 한일 국방회담, ‘군사협정 체결’ 공감대(1/10)

-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음. 양국 장관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음.
- 양국 장관은 군 당국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정보보호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음.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군사협정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실무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
-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밀보호협정보다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군사적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음.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PKO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공유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민정서를 고려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양국 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국방장관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간 부대 및 교육 교류, 수색구조훈련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합의도 있었음.
- 다만,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음.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등 초국가적이면서 비전통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일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연내 군사협정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음.



- 기타자와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1월 일본 방위청이 방위상으로 승격된 이후 일본 국방장관의 첫 방한임.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기타자와 방위상은 국립현충원을 들러 참배한 뒤 김 장관과 1시간30분 동안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음.
-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지역안보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기타자와 방위상은 “한일 국방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것을 국내외에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음.

● 한일국방장관 오늘 회담..군사협정체결 논의(1/10)

- 김관진 국방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함.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관심사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음.
-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협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문제는 현재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군사협정 체결 문제 협의를 시작하자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 양국은 오후 6시30분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우리 정부는 현재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상호군수지원협정은 8개국과 체결한 상태임.
- 군 관계자는 “두 협정의 체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하고 있다”며 “연내 체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2009년 4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 및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군사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기타자와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음. 기타자와 방위상은 11일 판문점(JSA)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소재 2함대사령부도 찾아가 천안함을 견학할 계획임.



라. 미·중 관계

● 후진타오 방미 시 기업인 500명 동행(1/16)

- 오는 18~21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 중국 기업인 500명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후 주석이 방미 기간 두번째 방문지인 시카고를 찾을 때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300~500명이 수행하게 된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6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후 주석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에 중서부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인 시카고를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임.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에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외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의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대거 수행할 것이라고 문회보는 전했다.
- 중국과 미국 양측 기업인들은 후 주석의 방미 기간 40여건의 각종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의 방문 기간 시카고에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인 각각 500여명이 참석하는 경제포럼이 열리게 됨.
- 앞서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후 주석의 방미 때 기업인 수행 규모를 묻는 말에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음.
- 후 주석이 미국 국빈방문 시 기업인들을 대거 대동하는 배경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 등으로 거세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후 주석이 이번 미국 방문 시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후 주석은 시카고 방문 시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중국 경제인들과 만나고 중국 기업의 전시회를 돌아본 후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이 설치된 ‘윌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중국과 홍콩의 정치분석가들은 후 주석이 시카고를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미국인들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13일 보도한 바 있음.
-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人民大)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시카고는 미국 심장지대(heartland)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곳”이라면서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은 미국의 중서부 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중국의 희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될



선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

● **中, 후진타오 방미중 美서 국가홍보(1/14)**

-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때맞춰 국가이미지 홍보에 나설 예정임. 중국 정부는 오는 18~21일로 예정된 후 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 뉴욕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선전하는 홍보영상물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신정보(新京報), 명보(明報) 등 중국과 홍콩 신문들이 14일 보도했음.
- 중국 정부가 후 주석의 방미 기간에 맞춰 뉴욕에서 내보낼 광고영상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작에 착수한 ‘국가이미지선전편’(國家形象宣傳片) 가운데 ‘인물편’(人物片)으로 30분 분량과 1분 분량의 두 종류라고 왕중웨이(王仲偉)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은 밝혔음.
- 두 종류의 홍보물은 텔레비전 방송망은 물론 뉴욕의 명물인 타임스 스퀘어 초대형 광고판을 통해서도 전파될 예정임. 중국의 국가이미지 영상물 인물편에는 중화권 최고 부자인 홍콩의 리카싱(李嘉誠) 청쿵(長江)실업 회장을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야오밍(姚明), 중국의 첫 우주인인 양리웨이(楊利偉),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다이빙 여제’ 귀징징(郭晶晶),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郎朗) 등이 등장함.
- 중국 정부는 ‘인물편’과는 별도로 50명의 명사가 출연해 중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12분 분량의 ‘각도편’(角度片)도 제작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각도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및 연구, 교육, 환경 등에서 중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중국의 해외 공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임. 이들 중국의 국가이미지 홍보 영상물은 물론 영어로 방송됨.
- 중국 정부의 국가 이미지 영상은 상하이(上海)의 광고회사인 영사광고(靈獅廣告)가 제작했으며, 6개월 이상 준비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처럼 국가이미지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은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임.
-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에 앞서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에 공자학원을 확대, 개설하고 해외 시청자들을 겨냥한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지난해 4월 BBC의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2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美상무, 中에 무역불균형 개선 촉구(1/14)**

- 미국 상무부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음.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각) 중국 내 미국 기업



들이 여전히 차별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공정한 상업적 관계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같은 로크 장관의 발언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거듭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임. 로크 장관은 막대한 무역 불균형이 세계적 안정과 번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크 장관은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중앙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미국과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은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규제나 합의 내용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로크 장관은 또, 지난 20~30년간 미·중관계를 형성했던 정책과 관행들은 앞으로 20~30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미국은 중국과의 ‘공평한 상업적 관계’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모두 2천520억달러로, 현재 추세대로 라면 작년 한해 무역적자는 2008년의 2천68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中외교부, 위안화절상 불가입장 재확인(1/13)

- 중국 외교부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 절상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중미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홍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와 무역은 ‘윈-윈’해야 한다”며 “현재 양국의 무역불균형은 국제적으로 산업 분업화가 초래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과 상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공박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공동 노력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조치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나 후 주석의 방미 때 기업인 수행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음. 홍 대변인은 아울러 후 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양국관계에서의 대사(大事)”라면서 “이를 통해 양국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촉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美 합참의장 “젠-20 등 中 첨단무기 美 직접 겨냥”(1/13)

-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비롯한 중국의 새로운 첨단무기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말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



자클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젠-20을 포함해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고급의 첨단무기들은 매우 분명하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의 군사 역량이 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탓에 중국과의 군사관계와 군사 교류를 갖는 것이 중국의 의도 등을 둘러싼 불투명성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멀린 의장은 중국이 지난 11일 시험비행에 성공한 젠-20을 개발한 것과 관련, “중국이 그동안 고급형의 첨단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나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젠-20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중요한 역량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군사 전문가들은 젠-20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A 랩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미국은 현재 작전 투입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 폭격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임.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중 중이던 11일 젠-20 시험비행을 실시해 미국에 초점을 맞춰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바 있음.
- 멀린 합참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로 군대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역량이 점점 위협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데 큰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이드너, ‘中환율 절상’ 또 촉구(1/12)

- 티머시 가이드너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중국의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면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위안화 절상을 거듭 촉구했다.
- 가이드너 장관은 이날 ‘미·중 경제관계의 앞 길’을 주제로 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초청 연설에서 “중국의 환율은 시장의 힘에 반응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언급은 다음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내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가이드너 장관은 중국이 위안화를 좀 더 빠른 절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촉진되고 자산가치 상승에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들 둘 모두 (중국의) 향후 성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는 또 “중국의 정책은 좀 더 유연한 환율 정책을 갖고 있는 다른 신흥시장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하지만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중국이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우리의 우려 사안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음.

● 中관영매체 “스텔스기 시험비행 대미 위협 아니다”(1/12)

- 중국 관영매체는 12일 스텔스 전투기 ‘젠-20(J-20)’ 시험비행이 미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려는 뜻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그것(J-20 시험비행)을 서태평양 함대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하늘과 바다에서 중국군의 경쟁은, 그것이 중국의 영역(doorstep) 안에서 벌어지는 한 미국의 안보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나아가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와 값싼 주택”이라며 “J-20은, 중국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의 한 해군 소장 역시 이 신문에 기고한 익명 논평을 통해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영토와 국제적 군사 우위에 도전할 능력과 의도가 없으며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발전과 군사행동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강조했다.
- 한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2일 만리장성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중국 내 군민(軍民) 지도부 간 갈등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중국의 ‘내부 균열’ 관측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게이츠 장관을 만날 당시 J-20 시험비행의 세부 사항을 몰랐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군부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불거졌음.

● 中, 후진타오 방미로 美와 경협촉진 희망(1/12)

- 중국 외교부의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은 12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이 부부장은 이어 “후 주석이 미국측과 한반도 문제 등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 후 주석은 오는 18~21일 미국을 방문해 1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미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이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공동된 희망”이라며 “후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후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음.

- 추이 부부장은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공통된 이익과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북핵 6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이 부부장은 아울러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과 관련해 “그 시험비행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 추이 부부장은 그러나 이번 후 주석의 방미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 게이츠, 美中 포괄적 군사회담 제안(1/12)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핵과 미사일방어(MD), 사이버 전쟁, 우주 공간의 군사적 사용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새로운 형식의 군사회담을 올 상반기 안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11일 밝혔음. 중국을 방문 중인 게이츠 장관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과 보다 폭넓은 군사회담 의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게이츠 장관이 제안한 군사회담이 열리면 이는 주로 해양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양국 군사교류를 넘어 광범위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첫번째 군사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게이츠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도 자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음. 게이츠 장관의 제안은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로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한 항의로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실무급 군사교류를 중단한 상태임.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대만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향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음.
- 게이츠 장관은 그러나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완화에 달려 있으며 “점진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 교류가 양국 군사관계 증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게이츠 장관은 양국 정보당국은 군에 비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음. 이 같은 발언은 양국이 군사적 불화 속에서도 막후에서 정보 분야 교류는 계속해왔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게이츠 장관은 후 주석과 면담 중에 중국이 이날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 비행을 실시한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이 젠-20 시험 비행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방중에 맞춰 실시했는지 여부를 후 주석에게 물었고 후 주석은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음.
- 게이츠 장관은 “후 주석이 이후에 이 비행이 사전계획된 것이며 나의 방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고



위급 국방관리는 “게이츠 장관이 질문했을 때 회담장에 있던 (군 인사 외의) 민간인 누구도 시험 비행에 대해 몰랐던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 美 “中, 경제불균형 해소 전념하는 자세 필요”(1/12)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실하고 눈에 보이는 전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11일(현지 시각) 촉구했음.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경제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에 대해 진실하고 눈에 보이는 전념하는 (중국의) 자세를 우리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8~21일 방미를 앞두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12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절상하고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이 관리는 또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실천하는 ‘속도’와, 앞으로 계속 실천하겠다는 ‘신념’ 둘 다가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지는 문제는 아니며 이러한 조치가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우리 측은 깊이 확신한다”고 덧붙였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작년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마주하고 회담을 가질 예정임. 따라서 가이트너 장관은 12일 발표에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글로벌 불균형의 한 원인이자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사안들을 시정할 때가 지금이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경제학자 애덤 허쉬는 전망했음.
- 다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위안화 절상 압박 등에 덜 적극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가 환율 문제 등에서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줄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사안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사드는 내다봤음.
- 중국은 작년 6월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 3% 절상한 바 있음. 한편 가이트너 장관에 이어 14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양국 관계에 대해 중요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여기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됨.

● 게이츠 장관, 中 제2포병사령부 방문(1/12)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중 마지막 날인 12일 중국의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 사령부를 방문함. 제2포병부대는 중국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게이츠 장관



- 은 방중길에 오르면서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등평-21D의 개발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은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이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로 서로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무기로, 중국이 이를 실전 배치하면 미군의 태평양 전략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임.
 - 이번 방문은 게이츠 장관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음. 게이츠 장관은 제2포병 부대를 방문하는 역대 3번째 미국 고위 관리임. 중국이 게이츠 장관의 제2포병부대 방문을 허용한 것은 자국의 무기 체계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홍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음.
 - 한편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관여우페이(關友飛) 부주임은 미중 양국군이 향후 관계 발전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반관영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했음. 관 부주임은 미국과 중국은 올해 상반기 해상안전협상과 양국 국방부 간 업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대테러, 평화유지, 항행 보호 등 영역에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게이츠 장관과 회담에서 “건강한 양군 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양군이 존중, 상호신뢰, 대등,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나가기야 한다”고 말했음.

● 게이츠 “北, 미사일·핵 실험 유예해야”(1/11)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주문했음. 게이츠 장관은 방중 사흘째인 이날 베이징(北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나눴냐고 묻자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무조건적인 대화재개 요구에 남한이 성의가 결여돼 있으며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게이츠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화와 관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북한을 자제시키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음.
-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자제를 이끌어냈다”며 “미·중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간에 더 긍정적인 관계가 조성되도록 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국방 “한반도 긴장완화 中역할에 사의”(1/11)

-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보여준 중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음. 게이츠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미 국방부 산하 매체인 ‘미군 프레스 서비스’가 베이징발로 전했다.
- 게이츠 장관은 량 부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한국 해안에서 실시된 미국의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해를 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 관련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온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지난 해 늦가을부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행동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우려사항인 동시에 나의 중국 방문의 핵심 의제였다”고 밝혔다.

● 미중 국방장관 회담..현안에 이견노출(1/10)

- 미국과 중국은 10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의 대만에의 무기판매와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나 서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음.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방중 이틀째를 맞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바이다러우(八一大樓)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군사현안과 국제정세 및 지역 안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량 국방부장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게 중국의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음. 그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중국은 중미관계를 더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중국은 지난해 1월 미 국방부가 대만에 미화 64억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당시 예정됐던 게이츠 장관의 방중도 연기했었음.
- 량 부장은 아울러 “중국군의 무기시스템 연구와 발전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으며 어디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량 부장의 이런 주장은 게이츠 장관이 중국의 ‘젠(殲)-20’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독자개발과 미 항모 격침이 가능한 새 유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데 따른 반응으로 보임.
- 미국은 중국이 ‘젠-20’의 개발이 시험운항 단계에 진입하고 이미 광범위한 실험과정을 거쳐 신형 대(對) 함정 탄도미사일(ASBM) ‘DF-21D’를 배치하는 초기단계에 접어들면서, 미 항모전단에 잠재적인



-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게이츠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이란핵과 남중국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량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미 군사관계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군사관계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발전시키려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존중, 신뢰, 대등, 호혜의 원칙 아래 공통 이익을 확대해나가고 모순과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미중 양군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된 궤도 위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미중 정상들이 양국 군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양국 군 사이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오해와 오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군이 각종 채널을 활용해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량 부장과 게이츠 장관은 양국이 서로 주권과 안보,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오해와 오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데 합의했음. 또한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올해 상반기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음.
 - 이런 가운데 게이츠 장관의 방중기간에 베이징을 찾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함한 북핵 6자회담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국방장관회담 오늘 베이징서 개최(1/10)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신문사는 게이츠 장관이 방중 둘째날인 이날 량광례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국제정세와 지역안전문제, 미중 군사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회담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회담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량 부장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서해 및 동중국해 등 자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미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진입 등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한 안보 위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게이츠 장관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을 독자개발하고 미 항모 격침이 가능한 새 유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따른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젠-20’의 개발이 시험운항 단계에 진입하고 이미 광범위한 실험과정을 거쳐 신형 대(對) 함정 탄도미사일(ASBM) ‘DF-21D’를 배치하는 초



- 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 항모전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게이츠 장관은 방중에 앞서 이번 방중 회담을 통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그는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음으로써 (한반도) 안정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 회담에서는 이란핵, 남중국해 문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신문사는 게이츠 장관이 방중 기간에 후 주석을 포함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 주석과 시 부주석은 각각 중앙군사위 주석과 부주석을 겸임하고 있음.
 - 게이츠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를 방문할 예정임. 게이츠 장관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12~14일 일본과 한국을 순방할 예정임. 이번 게이츠 장관의 방중은 이달 18~21일로 예정된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군사·안보 분야의 의제 사전 조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
 - 이와 함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게이츠 장관과 함께 9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11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외교라인과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함한 북핵 6자회담 관련 협의를 할 예정임.
 - 이런 가운데 홍콩의 일부 매체들은 중국이 ‘젠-20’의 시험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는가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젠-20’의 시험비행은 없었다면서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관련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음.
 - WSJ는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제로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젠-20’의 영상과 사진 자료가 일부 블로거들에게 유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뭔가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음.

마. 미·일 관계

● “미국방, 日에 전투기 구매 권유”(1/13)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을 만나 전투기 구매를 권유했다고 미 관리가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기타자와 방위상에게 일본의 전투기 역량 강화를 위해 F-35 통합공격기와



FA-18 호넷, F-15 이글 등 3종의 전투기 구매를 고려할 것을 제의했음.

- 게이츠 장관은 또한 미 국방부가 일본 측에 각 전투기의 장점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 같은 전언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닌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기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게이츠 장관은 앞서 11일 방중 당시 젠-20 시험비행 소식을 접하고 일본이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다면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은 “일본이 5세대 (전투기) 역량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그는 이어 “나는 그들(일본)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일본은 기존 F-4EJ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애초 미국의 F-22를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미국법이 F-22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종의 추가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미 정부 발표까지 나온 상황임. 일본은 구매 대상으로 FA-18, F-15와 함께 영국을 비롯한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日, 미사일 유럽 제공방안 연내 결론 내기로(1/13)

-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양국이 공동 개발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블럭2A)을 유럽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음.
-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미사일을 제3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조정을 가속한다는 방침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 기타자와 방위상은 또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은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서 무기나 생산기술 등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2004년 관방장관 담화에서 미·일의 MD 공동개발, 생산은 예외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미사일은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음.
- 하지만 미국이 2020년까지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인 규모의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미사일 제공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이날 회담에서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한 것임.
- 이 밖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한 문제에서 한미일 3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협조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미일 양국의 공동전략목표 수정 작업을 가속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沖繩)현 안에서 이전한다는 약속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일본측이 오키나와 주민의 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련 분산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게이츠 장관은 “대체 기지의 건설 진전에 따라 (경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 게이츠 장관은 기타자와 방위상을 만나기 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 회담했고, 이날 오후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났음.

바. 중·일 관계

● 日 ‘센카쿠의 날’ 행사..중선 日공관 유리창 깨져(1/14)

-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양국에서 신경전이 되풀이됐음. 14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 시민회관에서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시장과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 첫 행사가 열렸음.
- 이시가키시는 일본 행정구역상 센카쿠열도가 속한 지역으로,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로 매년 1월14일을 이른바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로 정했음. 일본이 1895년 1월14일에 센카쿠열도를 일본령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나카야마 시장은 식사에서 “센카쿠열도는 틀림없이 시(이시가키시)에 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주장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어나라 일본당’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赇夫) 대표와 자민당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중의원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도 참석했지만, 조례 채택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날 베이징에 있는 일본대사관 홍보문화센터의 유리창 2장이 깨져 있는 것이 발견돼 대사관측이 중국 외교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이날 낮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처음 본 문화센터 직원은 “현장에 금속 구슬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측은 이 일이 이시가키시에서 열린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 행사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문화센터가 호텔 건물에 세들어 있고 밖에서는 대사관 시설인지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 일·러 관계

● 러 국방차관, 남쿠릴열도 방문키로(1/15)

- 드미트리 불가코프 러시아 국방차관 등 시찰단이 오는 19~23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중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候>)와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擇捉>)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러시아 인터넷 팩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불가코프 차관은 두 섬에 주둔하는 기관총 포병사단을 시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할린 주 지사가 지난해 말 “러시아 국방장관 등 장관 여러 명이 올해 초 남쿠릴열도를 방문할 전망”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